

밀가루·설탕값 '9兆 짬짜미'... 업체들 무더기 기소

제분·제당기업 대표이사 포함
6년간 밀가루값 최고 42.4%↑
설탕가격도 5년새 66.7% 올라

밀가루·설탕·전기 등 민생 밀
집 품목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벌여
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이 대거
기소됐다.
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조사부

(나희경 부장검사)는 2025년 9월부
터 지난 1월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
하고,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
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
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
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.
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
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
수사해 대한제분·사조동아원·삼
양사·대신제분·삼화제분·한타

투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
한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.
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
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
동 여부,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
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
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
는다.
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
원으로 집계됐다.
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

42.4%까지 인상됐으며, 일부 상승
세가 완연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
22.7%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
인 것으로 파악됐다.
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
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. 제당사
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
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
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
한 혐의를 받는다.
조사 결과, 담합 규모는 3조2715

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.
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
비교하면 최고 66.7%가량 상승했
다.
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
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
뒤 '윗선'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
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
명 및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
다.
이대우 기자 nice@siminibo.co.kr

고령자 채용때 불이익 주면 처벌 현재 "합헌... 고용차별 금지 중대"

재판관 7:2 의견으로 결정

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
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
주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
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
왔다.
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
지난 1월29일 낸 윤영민·사·채
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
에서 '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
법률'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
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
정을 내렸다.

해당 조항은 '모집·채용에서
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
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
의 벌금에 처한다'고 규정한다.
헌재판부는 2013년과 2018년 신
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
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기면 서류
전형에서 배제하고, 기준을 충족
한 지원자들에게 대해서도 연령별
차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
행위를 재판에 넘겼다.
청구인들은 대법원에서 유죄를
확정받았다.
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중
해당 조항의 '합리적인 이유 없
이' '연령을 이유로 차별' 부분
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
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

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(위
헌소원)을 제기했다.
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최
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
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헌재는 '합리적인 이유'는 '어
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
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'을 의
미하고, '연령을 이유로 차별'은
'사람이 살아있는 한수에 따라 등급
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
구별하는 것'을 의미한다고 판단
했다.
아울러 헌재는 "해당 조항에
의해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계
약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지만 연
령으로 인한 차별이 '합리적인
이유'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돼
고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
수 없다"며 "반면 조항이 달성하
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
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
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"고
설명했다.
다만 검찰청 소장과 김복현 재
판관은 "모집·채용 분야는 근로
관계 형성 이전의 주면을 규율한
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과
관련해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가
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
있다"며 반대 의견을 냈다.
이대우 기자 nice@siminibo.co.kr

치과위생사에 채혈시킨 치과의사 法 "3개월 자가격리지하정명"

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
시한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
3개월이 내려진 것이 법원에서 적
절하다고 판단됐다.
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
법원 행정5부(부장판사 이경원)는
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
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
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
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
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
에게 환자 채혈을 맡긴 혐의로 기
소됐으며, 실제 채혈을 받은 환자는
57명에 달했다.
이전 재판에서 A씨는 의료법
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
았고, 이 형량은 확정됐다.
복지부는 이후 A씨가 '의료인이
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
하도록 한 경우'라며 자격정지 3
개월을 처분했다.
이에 A씨는 치과위생사의 업무
범위에 대한 착오였다는 이유로,
처분 기간을 15일로 줄여야 한다고
주장했다.
한편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
처분 규칙은 '의료기사에게 그 업
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' 자격
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
정한다.
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
받아들이지 않았다.
재판부는 "의료기사에게 의료행
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
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
는 것보다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
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어 제재의
형량상 차원에서라도 과다한 처분이
아니다"라고 판단했다.
아울러 A씨가 주장한 '의료기
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
때'는 "전도기 부착자 작성과 같이
의료기사가 업무 범위에 속하지
않지만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
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게 한
경우로 해석해야 한다"고 설명했다.
백소진 기자 zini@siminibo.co.kr



밤새 폭설

밤사이 눈이 내린 2월 2일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흰 눈으로 뒤덮여 있다.

/연합뉴스

20개 주요 사립대학 총학 "비민주적 절차로 등록금 인상"

전국대학 공동행동 기자회견
"작년 이어 올해도 3% 인상
형식적·일방적 등심위 운영"

대다수의 사립대가 새 학기 등
등록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학교와
학생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
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
위원회(등심위)의 비민주적 운영
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
촉구했다.
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공동행

동(공동행동)은 2일 서울 연세대
화정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기
자회견을 열고, 등록금 결정 과정
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문제를 비
판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마
련을 요구했다.
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, 연
세대, 서강대, 이화여대, 한국외
대, 경희대, 건국대, 동덕여대, 인
하대, 아주대 등 주요 20개 사립
대 총학생회 대표자가 참석했다.
공동행동은 "다수 사립 대학이
작년에 이어 올해도 3% 내외의
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"며

"학생들 입장에서는 3%라는 숫자
보다 누적되고 반복되는 인상으로
결과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
상황"이라고 밝혔다.
그러면서 "국가장학금 제2유형
연계 해제 등 등록금 인상을 제하
던 절차가 악화하는 시점과 맞
물려 (등록금 인상은)전국적인 문
제로 확산하고 있다"며 "비민주적
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
개별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
현상"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
렀다"고 지적했다.
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자

들은 등록금 심의·외결 기구인
등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
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대학의
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사례를
여러 차례 발견했다고 주장했다.
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
책위원장은 "학교는 일방적으로 선
입한 전교수 위원회를 앞세워 학생들
의 주머니에서 학교의 곳간을 채우
는 의결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했다"
며 "학생들은 학교 본부의 대외미
라는 명목 아래 인상방위 여대에 쓰
이는지도 모르고 있다"고 말했다.
문민호 기자 mmh@siminibo.co.kr

카카오 포파 협박글' 용의자 3명 특정

모두 10대... 디스코드서 활동
미해결 1건 중 12건 수사중

경찰이 카카오 등 대기업에 대
상으로 한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
해 10대 3명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
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회
답회에서 "카카오 사건 관련, 3명
의 용의자를 압수했다"며 "이들
이 총 11건의 범죄를 모두 저질렀
는지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"고
밝혔다.
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15일부
터 23일까지 카카오 CS센터(고객
센터) 게시판 등에 카카오와 네이
버, KT,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
폭발을 설치 협박글이 11차례 게
시된 것이 발단이다.
경찰에 따르면 최근 용의자로
특정된 10대 3명은 모두 디스코드
(Discord)에서 활발히 활동해 이른
바 '네임드'(인지도 있는 인물)
유저자였다.
이들은 '스왈로우'(swallow·하위
신고)를 직접 실행하거나 타인에

게 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.
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경기남
부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스와
팅 사건 1건을 포함해 총 12건을
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.
추거된 1건은 지난해 12월31일,
누군가가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폭
파 협박과 음기 위협을 하며 "100
억원을 입금하라"고 요구한 사건
이다.
경찰 관계자는 "현재까지 특정
한 용의자 중에 토스뱅크 범행을
한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,
입수를 분석 및 포렌식 등 필요한
작업을 하고 있다"며 "이들은 앞
서 구속한 디스코드내에서 스와팅
을 해 온 10대들과 관계를 맺어온
것으로 파악됐다"고 했다.
앞서 경찰은 광주 초월교 정수
가에 폭을 넣었다는 글을 올린 폭
포소년(1월6일), 오세훈 서울시장
살해 음모와 정재연단체 테러 예
고를 한 20대(1월8일), 고속철도
역과 지상파 방송국 폭파 협박을
한 10대(1월13일) 등 관련 사건 피
의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.
수원·임진포 기자 lim@siminibo.co.kr

前 프로야구 투수등 마약밀수 총책 적발

부산지검, 30대 2명 구속기소
1억 상당 케타민 1.9kg 반입

전직 프로야구 투수가 마약밀수
조직의 해외 총책으로 활동하다
구속기소됐다.

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
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(한정)로 A씨(33)와 B씨(30) 등
마약밀수 조직 총책 2명을 구속기
소했다고 2일 밝혔다.
검찰에 따르면 프로야구 투수
였던 A씨와 프로그램 개발자인 B

씨는 지난 2025년 9월부터 한 달
간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1
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케타민 1.9
k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
는다.
A씨는 최근 태국의 한 클럽에
서 밀수품을 1차례 투약하기도 한
것으로 파악됐다.
조사 결과, A씨와 B씨는 텔레그
램을 활용한 익명으로 운반책들에

게 지시해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
케타민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
드러났다.
검찰 관계자는 "국내 유통책 등
하선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고 범
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와 공
소 유지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"이
라고 전했다.
부산·청심일 기자
look7780@siminibo.co.kr

화원농협 이마트는김치



화원농협 이마트는김치 유튜브, SNS 채널에서는
화원농협의 소식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.



- 온라인**
- 화원농협 이마트는김치 쇼핑몰
(www.해남화원농협.com / www.hwkimchi.com)
 - 농협몰
(www.nonghyupmall.com)
 - 이마트몰(emart.ssg.com)
 - 해남미소, 남도장터
 - 쿠팡, G마켓, 11번가
 - 네이버 스마트스토어
(https://smartstore.naver.com/hwkimchi)

- 오프라인**
- 농협하나로클럽
(양재, 장동, 상남, 고양, 삼송, 수원, 목포, 광주 등)
 - 신세계 이마트, 이마트 트레이더스, 이랜드리테일
 - 이마트몰(emart.ssg.com)
 - 해남, 목포, 영암, 완도, 진도지역 학교급식
 - 해남 관내 관공서 및 병원
 - 목포, 부산대리점

이마트는김치 상품

